

여야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공방전

민주당 "황제휴가 근거 없다" 법사위 의원들 팩트체크
국민의힘 "소설이 실화돼... 특임검사 통해 수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8일 야권은 비난을 이어갔고, 여권은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특임검사 임명을 통한 수사에 힘을 실었다. 추 장관이 전날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선 의혹 해소 의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8개월째 그냥 수사 중인 상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적인 수사팀을 새로 꾸려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단계"라며 "지금은 수사 보고를 안 받는 단계가 아니라,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편한 자대배치, 올림픽 통역병, 자택 휴가 연장' 등으로 요약했다. 자녀를 위한 특혜와 외압이 이번 의혹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년들은 1시간만 복귀에 늦어도 '탈영'을 떠 올린다"며 "하지만 추 장관 측은 '미군 규정에 따랐다'고 강변하며 휴가 전화 연장 특혜의 본질을 피해간다"고 비판했다. 또 "소설이 실화가 돼가고 있다"며 "불법과 편법을 상식이라고 호도하는 궤변 릴레이를 멈춰 세우는 것은 추 장관 본인만 할 수 있다"며 추 장관이 직접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관련 수사에 군 검찰이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안의 90% 이상이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군 검찰이 인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서울동부지검도 군의 협조 없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추 장관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태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

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보통 국민은 행사가 불가능한 반칙과 특권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같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일한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 장관이 사실 관계가 파악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며 "정치는 잠깐 기다리고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야당의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요구에 대해선 "지금 검찰 수사 능력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

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드는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당시 추 장관 측 보좌관이 군에 청탁 전화를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니까 엄마가 아니라 보좌관 형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어봤다는 것"이라며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길이 험난하다. 추 장관 청문회 시즌 2가 진행되나 싶더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지난 겨울 촛불이 온다"고 적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재가동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여, 진정한 협치 기대...추, 수사 자청해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의료 체계 마련, 여·야·의·정 논의하자"

국민의힘 주호영(사진)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진 채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

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고 소동을 촉구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며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인데,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선심 쓸 일만 골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들 군 복무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



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에 대해 '한마디로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태도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포퓰리즘 재판을 부추기고 있다"고 김영수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시기구에 대해 "국민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탈원전 정책과 맞물린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는 폐해와 발전 효과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른바 우분투 협치를 강조한 것에 대해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정부, 9조원대 민생대책 주중 발표

고용 지원·투자 활성화·서민 물가 안정 방안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타격 대응을 위해 최대 9조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한다. 긴급민생안정대책은 이른바 이번 주중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4차 추경까지 포함해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연례협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수출·소비 등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한편, 근본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4차 추경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경기대책에는 남아있는 예비비 등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1조원대가 거론된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경기대책에 고용 지원과 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특히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급액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포함해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관련 지원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기존 대책 중 연장이 가능한 것과 추가 자금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투자 부문은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서 활로를 찾을 전망이다. 대규모 민간 투자 발굴과 지원도 이어간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와 집중호우·태풍 피해 품목 비축물량 방출 등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도 이번 민생안정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與 지도부 초청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전보장·최대성 정부수석 등이 자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이달 3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대표를 만난 적이 있으나, 민

주당 새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새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며 당청 간 소통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정치국회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및 예산안 등에 머리를 맞출 전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여의도 브리핑

서삼석, 섬발전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8일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 등을 위한 섬발전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섬의 무인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도서개발촉진법' 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거주 10인 미만 섬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섬은) 국가의 최전선에 있는 영토이자, 주민의 삶의 공간인 섬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청정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함께 발의한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세계시장의 58.3%를 점유하고, 연간 5억20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국내 김산업에 김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학 부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 전공 / 교정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음이 있는 대학 · 믿음으로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